

송하진 전북도정 민선 6기 3년 성과·향후 계획 해설

‘도민들과 함께 2020 대도약 이루자’

민선 6기 송하진 전북도정은 3년 동안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차근차근 재정립 해가면서 생동하는 발전시책을 추진해 왔다.

송하진 도정은 남은 1년 동안 당면 현안 해결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다져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9일 민선 6기 3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시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전북 뭍 찾기’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2020 전북대도약을 이루자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지난 3년간 장기적 성장 비전을 도출하고 이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에 담아내는 등 전북의 정체성과 자긍심, 위상을 재정립하는 전북발전의 틀을 새롭게 규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50여년간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으로 개발된 국가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해 전라도 중심에서 변방으로 전락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전북 독자 권역으로 성장기반을 갖춰 국가의 재정 지원 등 전북 뭍을 찾아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주요 핵심 골자이다. 도민들은 물론 중앙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전북 발전의 틀 새롭게 규정 현안 해결·지속가능 발전 추구 6대 분야 19개 핵심 과제 구체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들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사업처럼 비정상적인 국가사업 추진 등 차별받은 전북의 현실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직접 챙기겠다”,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혀 전북도정에 추진력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농업의 미래를 개척하고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이어 전북발전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려는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와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려는 전북혁신도시 시·군2 사업 등 모두 10개 과제 30개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돼 대도약의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

전북도가 6월 19세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도민들의 의견도도가 설정한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은 여론조사에서 전북 뭍 찾기에 있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국가예산 확대가 31.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북 독자권역 설정 28.0%, 새만금 등 국가사업 정상 추진 20.8% 순으로 나타나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북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치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들은 또 전북도가 새 정부에 건의한 전북 현안 중 지역발전에 기여할 과제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국가 주도 새만금 신공항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31.3%로 가장 높았고,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 21.2%,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전북혁신도시 조성 17.7% 순으로 응답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도정 현안을 제대로 담아줬다는 평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생명산업 육성 24.0%, 탄소산업 메가 조성 22.5%, 전북투어패스 등 토틀관광 19.9% 등으로 중점 추진하길 원하고 있다.

전북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로는 한옥마을과 백제역사유적 등 전통문화자원 32.0%, 새만금 22.4%, 농생명 21.7% 라고 도민들은 평가했다.

전북도는 이같은 도민들의 바람과 도정의 목표 설정이 부합함에 따라 ▲삼

라농정 기반, 농생명산업으로 농업의 미래 개척 ▲국제적 수준의 관광거점 육성으로 관광 1번지 특화 ▲탄소산업, 대한민국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새만금 사업 등 SOC 확충으로 균형발전 촉진 ▲따뜻하고 안전한 전북 만들기 ▲국정 제1과제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 등 모두 6대 분야 19개 과제를 2020 대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로 선정,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년 열심히 뛰었다. 전북 뭍 찾기를 통해 전북이 대도약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며 “국내적으로는 전북이 마땅히 받아야 할 뭍을 제대로 찾아 전라도 정도 1000년에 걸맞는 중심으로 정체성을 찾을 것이며 이번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이어 2023세계잡머리 새만금 유치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전북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지사는 또 “우리 전북이 온전하게 뭍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지금이 전북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호기라면 이를 성공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축하드립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기자실에서 홍준표 신임 대표가 당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3인방’ 징역 5년 구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배재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업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신동철(55)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등 3명의 직권남용관리행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에게도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비록 김 전 장관 등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지원배제 업무는 장관 취임 전부터 기획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 변호인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이 블랙리스트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명단을 검토할 일이 없었다”며 “국 민소통관실은 김 전 비서관에게 받은 명단을 문체부에 넘겼을 뿐, 심도있는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차관 변호인은 “정 전 차관은 지원배제 방침이나 기준이 만들어진 뒤 취임했다”며 “소극적이고 기계적으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장관 취임 전부터 블랙리스트가 중요한 국정 기조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게 송구스럽다. 이번 계기로 문화예술계 지원 기준이 명확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신 전 비서관은 “죽을 때까지 블랙리스트라는 멍에를 지고 살게 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전 차관도 “이번 사건으로 고통 받은 모든 분께 죄송하고 면목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10분 김 전 장관 등 3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순선(51) 전 문체부장관 등 4명의 선고도 함께 내려질 전망이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블랙리스트 업무에 소극적인 문체부 국장 3명을 부당 인사초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지원배제 명단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일부 관여한 것은 맞지만, 워선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피고인 신문에서도 “부임 전부터 블랙리스트 업무가 진행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뉴스

국민의당, ‘조작과문’ 이유미 단독범행 최종결론

김관영 “검증시스템 무력했으나 조직적 증거 조작할 만큼 파렴치한 정당 아냐”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3일 이른바 ‘문준용 제보조작 과문’에 대해 이유미씨 단독 범행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당시 대표와 조작증거 발표 전 한차례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증부실 책임 등을 두고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 개입? 당이 증거조작 못 걸러내... 무력했을 뿐”

김관영 단장은 이날 당의 조작 과문에 대한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해 “증거를 조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에 당 검증시스템은 증거조작을 걸러내지 못하고 무력했다”며 “그러나 검증에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조직적으로 없는 증거를 조작할 만큼 미숙하거나 파렴치한 정당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유미씨 개인의 조작행위에 당 전체가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특히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역시 조작행위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단장은 이에 대해서는 이씨가 조작 사실을 고백한 직후인 지난달 25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이 가진 5차 면담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김 단장은 특히 논란이 됐던 이씨의 5월 8일자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는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사실대로라고 하는 것은 ‘증거조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 대화내용을 너무 확대해 밝혔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이해했다는 게 이 전 최고위원의 진술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준서 ‘박지원과 5월1일 통화’ 진술... 추가 쟁점될 듯

한편 이날 최종조사결과 발표에선 중간 발표와 달리 박지원 전 대표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조작제보 기자회견 전 한차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박 전 대표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통화를 통해 제보 내용을 미리 들었다면 검증소홀 책임론이 일 수 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진상조사단 3차 조사에서 지난 5월1일 박 전 대표와 한차례 짧게 통화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다만 “제보의 구체적 내용을 의논한 게 아니라 이 전 최고위원이 바이버를 통해 자료를 보냈으니 확인해 보라는 간단한 내용의 통화였다”며 “그날 이후 박 전 대표와 이 전 최고위원 간에 어떤 통화나 문자가 있었음도 확인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통화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이용주 보고 받고 이유미 문자 확인

한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유미씨로부터 이른바 ‘구명 문자’를 받은 시각은 이용주 의원의 조작 과문 보고를 듣기 전인 6월25일 오전 7시3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대표는 그러나 당시엔 문자가 왔다는 알림만 확인했을 뿐 문자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 전 대표는 이후 같은 날 9시47분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전화로 ‘조작 과문’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그 뒤에야 이씨가 보낸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는 게 김 단장이 파악한 내용이다.

안 전 대표는 이후 이씨에게 별도로 답장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지 않았으며, 박 주선 비대위위원장에게 당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안 전 대표는 이후 이뤄진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대단히 엄중히 생각하고, 국민과 당에게 정말 죄송할 일이 발생했다”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한 진상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단장은 전했다. /뉴스

국립전주박물관,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